

박경철의 '오디세이아'



세금 투명성과 과세 정의

납유력, 특히 그리스는 OECD 국가 중 탈세가 가장 만연한 나라 중 하나다. 그리스는 선박왕국 같은 재벌, 의사·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노골적으로 탈세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공공연한 탈세의 원인을 400년간 지속되었던 터키 지배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이를테면 터키 감점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애국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논리가 공색하다는 것은 그리스 사람 스스로도 잘 안다. 그리스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 달리 유럽국가 중에서 복지예산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이유도 바로 이 세수 부족 탓이 크다.

어쨌든 그리스를 비롯한 납유력이 금융위기에 속해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후, 탈세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그리스 정부는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수영장 딸린 집에 살면서도 재산세 한 푼 내지 않던 파렴치한 탈세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등의 강력한 세수 확보 정책을 시행했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면서 최근까지 그리스의 납세 문화가 확 바뀌게 되었다.

특급호텔에서도 현금 할인을 하고, 카드 결제는 아예 전원코드까지 뽑아 버리던 상가가 신용카드 결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또 길거리 노점이나 주말 번개시장을 웨스턴 할 수 있다는 공개 금지 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는 가장 많은 자본 도피자를 보유한 나라이면서 사실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대부분의 부를 소유한 부자들이 이렇게 자본을 도피하며, 본사까지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다급해졌고 결국 이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견제는 무더졌다. 그러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들도 다시 영수증 발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전국인 탈세 시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다.

그리스에서 보듯 세금체계가 한번 흔들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논란이 뜨겁다. 소득 공제 축소로 인해 서민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고사하고 더 많은 세금폭탄을 떠안게 된 '13월의 테러'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한데 그리스 언론사들은 전혀 그것을

보도하지 않았고 심지어 재산 도피자 명단을 취재해서 보도하려던 한 잡지사는 법원의 행정명령에 의해 보도가 강제로 저지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는 공개 금지 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는 가장 많은 자본 도피자를 보유한 나라이면서 사실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대부분의 부를 소유한 부자들이 이렇게 자본을 도피하며, 본사까지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다급해졌고 결국 이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견제는 무더졌다. 그러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들도 다시 영수증 발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전국인 탈세 시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다.

그리스에서 보듯 세금체계가 한번 흔들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논란이 뜨겁다. 소득 공제 축소로 인해 서민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고사하고 더 많은 세금폭탄을 떠안게 된 '13월의 테러'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리스처럼 증세가

필요하다. 경기 위축으로 세수는 감소하고 정부는 복지수요나 재정을 부양 할 재원이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는 국민들을 잘 설득했다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문제였을 수도 있다. 어쨌든 본질은 고소득자에 불리하고 중산층 이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연세 인상이나 소득세율 최고 구간 확대와 같은 과감한 정책을 먼저 시행하지 않고, 땀땀인 인상과 같은 정책은 거침없이 시행했다.

불신이 쌓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땀땀인 인상은 흡연자건 아니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세금전쟁으로 비쳤고, 정부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세수를 채운다는 의심을 사게 된 것이다. 그리스의 납세체제가 무너진 이유가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 처럼, 우리도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정책이 힘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세금 문제는 한번 흔들리면 그리스처럼 걷잡을 수 없다. 정부는 세금문제에 대해 더 솔직해져야 한다. 그리고 공평과세 문제에 더 과감해야 한다.

(지식나눔네트워크 대표)

종교칼럼



김영철
광주 남동5·18기념성당 주임신부

천주교 신자들, 특히 어린아이들은 저에게 자주 묻습니다. "신부님은 왜 신부님이 되었어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우스갯소리로 말해줍니다.. "실연을 당해서.., 멋져보여서.., 한 여자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느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

저는 천주교를 중학교 때 처음 알았고 고1 때 세례(천주교 신자가 되는 예식)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요한보스코(살레시오회 창시자, 흔히 돈보스코라 불림)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니다. 그때 제 마음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끌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커져만 갔습니다. 제 마음은 어떤 울림으로 서서히 점차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

나는 왜 신부가 되었는가?

습니다. 그때 제 눈에 보인 것이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 신부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저거구나,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앞길을 막는 복병이 있었습니다. 저는 삼대독자였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골에서 자랐지만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사랑만은 독차지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이 천주교의 신부가,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신부가 되면 대가 끊기니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부모님은 특히, 아버지는 완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이유는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대를 끊어가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안 된다"는 자식 사랑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방황의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모님이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세례(로사리아)를 받으시고, 1년 뒤 저를 고인이 되신 아버지가 세례(로마노)를 받으셨습니다. 아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자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후에 남들 보다는 조금 늦게 신학교(광주가톨릭대학교)에 들어가 수 있었습니니다. 지금 저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신부입니다.

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는 "자신이 선택해서 한 번 신부 되었으니 죽을 때까지 하라"는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신부가 되기까지 걸여온 길은 때론 지치고 힘들고 방황하며 때론 돌아가기도 하는 지극히 평범한 길이었습니다. 신부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는 지금도 한 가정의 삼대독자이고 한 부모님의 자식입니다.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되는 그 삶의 과정은 이런 것들로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라고 하는 존재가 부모로부터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왜 신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천주교 신자가 되면서 내 마음 안에 울렸던 그 울림은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제 삶이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끌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생명, 삶)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생물학적,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은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자신에 대해 알고 생각하고 고통과 기쁨, 사랑과 미움 등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단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과 인격을 지니

고 삶의 의미에 대해 묻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와 달과 꽃을 보면서 감탄할 줄 알고 사람들의 작은 일에 감동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존재는 신비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이끌리며 무의식적으로 의지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마음의 소리도 들립니다.

우리의 삶은 인간적이면서도 신비의 삶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것 너머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신비로 불분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신비로 보는 아름다운 눈을 지닌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신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인간적인 눈으로만 세상과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을 대상하고 작위하고 억압하고 짓밟습니다. 신비의 삶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신비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신비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제목인 '나는 왜 신부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의 대답입니다.

기고



한국한
전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

지난해 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에 공공기관 16개(전력산업, 정보통신, 농업기반, 사학연금공단 등) 중 13개가 이전되면서 지금까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소외 된 광주·전남 지역은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맞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중심 발전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경제를 지역특화발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을 11개 광역자치체로 이전하여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의 국제사업이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는 국내 최대의 공공기업 한국전력 본사가 이전, 이제 '나주시대'를 개막했다. 한전은 총자산 155조5000억원, 매출액 54조원, 임직원 수 1만9644명으로 호남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최대 공공기업 한국전력의 유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의 위상을 크게 높이

빛가람혁신도시의 출범과 기대

고 있다. 올해 총예산 72조원 규모로 전남도 6조2831억원, 전남교육청 325534억원(합계 9조 3365억원), 광주시 3358485억원, 광주시교육청 1356922억원(합계 5조 5407억원), 나주시 5181억원과 비교해 보면 한전의 성공여부에 따라 나주혁신도시의 위상이 더욱 달라질 것임을 알 수 있다.

한전은 광주·전남과 상생발전을 위해 올해 2622억원을 지역에 투자하는데, '지역진흥사업'에 1274억원 '지역 전력공급 안정화'에 1348억원을 투자한다. 조환익 사장은 "에너지 수도 건설과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기구현을 위해, 국내부사장이 주도하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추진TF팀'을 신설, 지자체·이전기관·유관기관·민간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해 공동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거기에서 '지역진흥사업'으로 빛가람지역(광주·전남, 나주) 감소기업 유치와 육성, 지역대학·인재 육성 등 지역상생협력을 위해 3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비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이번 한전과 관련기관 이전은 에너지 관련 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국내 첫 에너지밸리(Energy Valley)가 탄생될 것인데, 광주·전남권을 '전력산업 특화 창조경제 혁신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의 현실화이다. 그

래서 미국 인터넷사업을 주도하는 실리콘밸리, 보스턴의 IT클러스터와 이를 벤치마킹한 국내 테헤란밸리, 대덕밸리가 있다면 나주혁신도시는 에너지 관련기업과 연구소들이 더 많이 포진하여 기술·정보 교류를 통하여 '에너지밸리의 메카'로 창조경제를 선도(先導)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

한전은 본사의 나주 이전으로 열약한 광주·전남의 상황을 파악,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산학연 R&D,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하니 큰 기대가 되는 것이다. 더욱 희망적 것은 "지금까지의 나쁜 관행, 잘못된 편견 등을 과감히 버리고 새 출발을 하자", "한전이 나주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의 상생을 통한 국내 최대 공공기업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광주·전남의 자랑거리이자 혁신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 사장이 강조한 점은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갖게 한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컨셉은 '그린에너지 시범도시'로서 '전력산업'을 핵심기능으로 하여 새로운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한전은 KT와 정보통신 및 에너지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새 시장 개척에 나서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도서지역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지역 사회 공동발전을 이끌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모범사례의 계획도 세웠다.

결국, 광주·전남은 '이전기관 정주(定住) 관련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전기관들이 미래의 '블루오션'을 크게 개척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 조성, 투자유치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주거·생활·교육·문화 등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사람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재탄생 되도록 해야 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광역자치단체가 유치해 낸 광주·전남 혁신도시에는 '빛가람도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전남의 상생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이전기관들과 시·도민들을 '지역공동체'로 결집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참여적·미래지향적 리더십이 필수적이며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16개 공공기업의 이전으로 조성되는 '빛가람혁신도시'가 모범적 성공 사례가 되어 그 혜택이 광주·전남지역에 골고루 돌아가는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하며, 타 혁신도시와는 차별화하여 해방 70년,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역사를 펼쳐나가길 바란다.

社說

KTX 서대전 경유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의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 철회' 요구에 대해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서 장관은 21일 호남권 국회의원들이 서대전역 경유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자 "코레일이 제출한 운영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다"며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어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15일 국토부 주관으로 코레일, 광주시, 대전시 등이 참석한 '호남선 KTX 운영계획' 회의에서 서대전역 경유 문제가 공식 거론됐다 는 점에서 면피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또 호남고속철 정차역을 놓고 광주와 대전지역에 이종차대를 적용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전시는 연간 대전지역 철도 이용객 중 30%가 서대전역을 이용하는 만큼 주변의 상권 붕괴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

나 같은 논리로 따지면 광주역 진입도 허용해야 옳다. 이용객이 서대전역보다 광주역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광주역 진입 제의 또한 설득력이 없다.

서대전역으로 우회할 경우 서울-광주까지 기존 1시간 33분에서 2시간 18분으로 늘어나 지속철로 주저했는데도 국토부가 호남선 전체 편수 가운데 20%를 서대전역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고속철도로서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

그동안 말을 아껴오던 같은 충청권인 충북도조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도 이런 이유다. 충북도는 22일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는 KTX 본연의 고속철도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국토부는 어떠한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본질마저 벗어난 광주역 제외와 서대전역 경유안을 철회하고 호남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아니라면 호남 지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밀입국 통로 전남 항구, 강력 단속 나서야

목포와 완도 등 전남지역 항구가 가장 쉽고 대표적인 외국인 밀입국 통로가 되고 있다. 제주도로 들어오면 내륙으로 들어오는 창구로 외국인들 사이에 널리 소개까지 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 없이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수는 지난 2012년 23만 명에서 2013년 42만 명, 지난해에는 64만 명으로 3년 동안 130만 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한다. 이 기간에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552명이며 해마다 2배 이상 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 대부분이 목포나 완도항을 통해 몰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항은 7곳의 차량 검색대 중 X-레이 투시기 설치·운영은 단 한 곳에 불과하며 목포와 완도항에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일단 제주항만 벗어나면 육지로 잠입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만 이야기다.

전남 항구에는 자체 검색 기능이 없거나 단속은 주민의 신고나 불법이탈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도 중국인 2명이 승합차 루프백스에 숨어 들어오다 완도항에서 적발됐지만 제주항에서 배에 타기 전 숨는 장면을 본 주민의 신고로 올린 실적이 뿐이다. 보안검색 장비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여객선의 허술한 승선관리도 밀입국 단속의 취약점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승선인원 확인 부실에 따라 정부가 여객선 승선자 신분 확인 등을 항공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요원한 상황이다.

불법체류자는 '벌포 시한폭탄'이란 말까지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말 수원 도막사신 살해사건에서 보듯 강력범죄 등 온갖 사회적 범죄를 낳고 있다. 중국에서는 600만~1000만 원만 주면 밀입국을 알선해 준다는 광고가 넘쳐난다고 한다. 정부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강력한 밀입국 단속을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모두 닳이 나가 망연자실해 있을 때 시인은 구역구역 시를 썼다. "이것에 대해 글을 안쓰면 내가 시인인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함민복의 '숨 쉬기도 미안한 사일'이었다.

"나는 괜창다고 바깥 세상을 안심시켜 주던/ 가족들 목소리가 여운으로 남은/ 핸드폰을 다급히 품고/ 물 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러 보았을/ 공기방울 글씨/ 엄마,/ 아빠, /사랑해!/ 아, 이 공기, 숨 쉬기도 미안한 사일"

5월 7일 홀로 팽목항을 찾았던 작가 박정용 역시 마찬가지로였다. 슬픔과 분노를 넘어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모든 조항의 힘으로 그들을 온전히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5개월간 작업에 몰두했고, 광주 제회갤러리에서 '온전히 구하려라'전을 열었다.

125일 동안 진도 앞바다 물에 넣었다 깎집어낸 조각상이 전시됐다. 잠수함 모형 속 창문 너머로 "저기요, 누구 없어요?"라 외치는 다급한 여학생의 목소리와 창문을 두드리는 손바닥이 아련한 작품 "저기요"가 세상에 나왔다.

출판사 문학동네가 '4·16 세월호를 생 각하다'를 특집으로 다룬 계간 '문학동

네' 가을호는 계간지 역사상 처음으로 3쇄 인쇄에 들어가 총 5500부를 찍었다.

문학동네는 가을호와 여름호에 실린 소설가들의 작품과 사회학, 정신분석학, 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의 세월호 관련 글을 묶어 '논자들의 국가'를 펴냈고 판매 대금 1억 원을 세월호 문화예술인 대책모임 등에 기부했다. 고은 등 시인 67명이 참여한 추모 시집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기록물 '금요일에 돌아오렴' 등도 나왔다.

지난해 말에는 세월호 달력도 선보였다. 흰 바탕에 검은 색 숫자와 글씨로만 구성된 '기억하라, 기록하라'라. 나희덕 시인이 암울했던 1980년대 쓴 시 '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에서 따왔다.

23일 작가회의 회원 45명이 팽목항을 찾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호 사건이 점점 잊히는 게 유독에게는 가장 큰 슬픈 일이고 작가들이 할 일은 그런 슬픈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이어서다.

가장 무겁고 슬픈 것 잊혀지는 일이다. 예술가의 역할을 세상 생각해 본다. 세상의 모든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그들'에 의지해서라도, 기억할 일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